바다 이야기

중학생용

해양 교재(해양정책/법/국제협력편)

Contents

Ⅰ

해양법의 주요 용어 4

1. 영해 7
2. 접속수역 8
3. 대륙붕 9
4.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수역 10
5. 공해 11
6. 심해저 11
7. 국제해협 12

Ⅱ

독도, 이어도 문제 및 섬의 중요성 14

1. 독도역사와 우리 영유권 16
   1) 우리의 주장 16
   2) 일본의 주장과 허구 20
2. 이어도의 법적지위 23
3. 국가영토로서 섬의 중요성 24

Ⅲ

동해지명문제 26

Ⅳ

해양관련 동북아협력체제의 이해 30

1. 해양자원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협력 체제 30
   1)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이해 30
   2) 1998년 한일어업협정 32
   3) 2000년 한중어업협정 32
   4)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33
2. 해양환경협력 34
3. 해적 활동 대비 협력 34



Ⅴ

해양법의 이해 38

Ⅵ

해양관련 주요 국제기구 40
1. 국제해양법재판소 40
2. 국제심해저기구 42
3. 국제해사기구 43
4. 국제수로기구 44
5. UN식량농업기구 45
6. 국제포경위원회 47
7.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 48

Ⅶ

극지문제 50
1. 북극 50
2. 남극 52

Ⅷ

우리나라 해양정책 54

Ⅸ

관련 직업의 세계 56
1. 학자 및 연구원 56
2. 정부공무원 56
3. 국제기구 국제공무원 57



I

해양법의 주요 용어

1. 영해
2. 접속수역
3. 대륙붕
4.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수역
5. 공해
6. 심해저
7. 국제해협





Ⅰ. 해양법의 주요 용어

Ⅰ. 해양법의 주요 용어

해양은 오랜 역사동안 인류 무역의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육지영토를 외침으로부터 방어하는 수단으로 주요한 군사전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해양에 서식하는 수산물은 연안의 거주민들에게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더구나 인류의 해양지식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해양은 인류에게 필요한 주요한 자원의 보고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인류는 해양을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은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특정 수역은 자기 나라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라 인식하는 법학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해양은 모든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므로 해양활동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법학자들도 양성하게 되었다. 이들 중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1]는 자유해 이론을 제창한 국제법학자로 유명하다. 다시 말하면, 국제교역의 자유로운 교통로를 확보하려는 법학자들에 의해 해양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자유로운 해양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유해 이론이 제창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은 국가의 주권에 종속한다는 폐쇄해 이론이 제창되었다. 이러한 서로 대립되는 이론이 상호 절충되어 자유해

1) 1583~1645 국제법의 아버지,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법학자 및 정치가.

이론은 오늘날 공해제도를 낳게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고, 폐쇄해 이론은 오늘날 영해제도를 낳게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영해제도와 공해제도는 그 법적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한편 영해의 경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흔히 영토, 영공과 함께 국가영역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해는 어떤 국가의 주권에도 귀속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의 사용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즉 모든 국가는 그 이용에 있어서 광범위한 자유를 향유하는 수역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은 국가주권이 미치는 정도와 그 기능적 성격에 따라 크게 영해, 접속수역, 국제해협,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공해, 심해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휴고 그로티우스
(자료 : http://www.nndb.com/people/685/000096397)

1. 영해 (Territorial Sea)

국가영역은 영토, 영해 및 영공으로 구성된다. 영해라 함은 영토와 내수(육지부 내수면), 하천, 호수 등등의 외측한계로부터 바다 쪽으로 향한 연안의 인접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의미한다.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라는 바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해의 상공 및 해저와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영공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영공이 영토의 상부공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와 영해의 상부공간이라는 점이다. 영해의 외측한계 즉 그 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선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출발하며 기선은 영토의 일부를 구성하는 소위 내수와 영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선이며, 영해기선의 결정방법으로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존재한다. 통상기선이라 함은 연안국에 의해 공인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일컫는 것이다. 직선기선이라 함은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하게 이탈되지 않았으며, 직선기선의 내측수역이 내수제도에 의해 규율될 수 있을 만큼 그 수역이 육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경우 사용되는 직선으로 구성된 기선

을 말한다. 오늘날 50여개 이상의 국가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을 따라 섬이 빽빽하게 산재한 연안의 일부에 직선기선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1982년에 채택된 UN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해의 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이 빽빽하게 위치하고 있는 서해와 남해에서는 직선기선제도를 채택하고 동해에서는 통상기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다만 영일만에서는 만의 입구를 연결한 직선기선을 취하고 있음), 대한해협(3해리)을 제외하고는 12해리의 영해를 선포하였다.



▲ 한국의 직선기선
US Department of State,
Limits in the Seas, No. 82

2.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과거에는 연안국이 영해의 외측한계를 넘어서는 수역에서 특정의 관할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관행상 인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연안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의 관세, 재정, 출입국, 위생에 관한 국내법령의 위반방지 또는 처벌을 위해 영해의 폭보다 넓은 일정한 폭의 수역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설정된 수역이 바로 접속수역이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접속수역제도는 연안국에게 추가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영해의 확장과 배타적경제수역제도에 의한 연안국 관할권의 확대현상으로 인하여 실용적 가치는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안보의 목적으로 접속수역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안보라는 목적의 정의가 상당히 주관적이며 해양법 관련 국제협약상 혹은 일반 국제법상

그 근거규정을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12해리까지 접속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3. 대륙붕 (Continental Shelf)

대륙붕은 지형학적으로는 토사가 퇴적되어 융기한 것으로, 평평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질학적 대륙붕과 평지에서 갑자기 급경사를 이루며 펼쳐지는 경사부분인 대륙사면 및 다시 경사가 완만해져 해저와 연결되는 대륙융기로 이루어진 대륙변계 전체를 의미하지만 대륙붕의 법적 정의는 이러한 지형학상의 물리적 특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1945년 미국은 트루먼선언을 통해 미국 연안에 인접하고 있으나 공해 아래에 위치한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은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과 지배하에 둔다고 선언했다. 이후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가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여 대륙붕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가관행이 결국 법제화되어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라고 하였지만 대륙붕에는 '주권적 권리'가 미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주권적 권리는 주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주권과는 달리 탐사, 개발, 관리 및 보존 등과 같은 기능적 이용에 한정된 권리로 주권보다는 좁은 개념의 권리라 할 수 있다.

4. 배타적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과 어업수역 (Fisheries Zone)

배타적경제수역은 앞서 설명한 대륙붕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은 그 폭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륙붕처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해저와 하층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상부수역에도 주권적 권리가 미친다. 그 밖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와 같은 경제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외에도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해서 광범위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연안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 역시 항행, 상공비행, 해저전선 및 관선의 부설 등과 같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일정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과 동일시 해서는 곤란하다.

배타적경제수역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도 많은 국가들은 200해리 이내의 생물자원 즉 어족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200해리 어업수역이 독자적인 존재이유를 상실했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들은 200해리 어업수역을 유지하고 있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다.

5. 공해 (High Seas)

공해는 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과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가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어업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 인공섬 건설의 자유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등록국가인 기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기국주의라 하는데, 기국주의는 즉 기국만이 선박에 관해 형사 및 민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박의 국적과 관련하여 편의치적[2]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편의치적은 선박의 등록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외국인이 소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등록을 허가하고 있으며, 등록세만 납부하면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저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박소유주들이 이러한 곳에 선박을 등록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결국 선박의 등록허가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선박의 노동조건도 열악하며 안전조건도 엄격하지 않아 편의치적은 해상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편의치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도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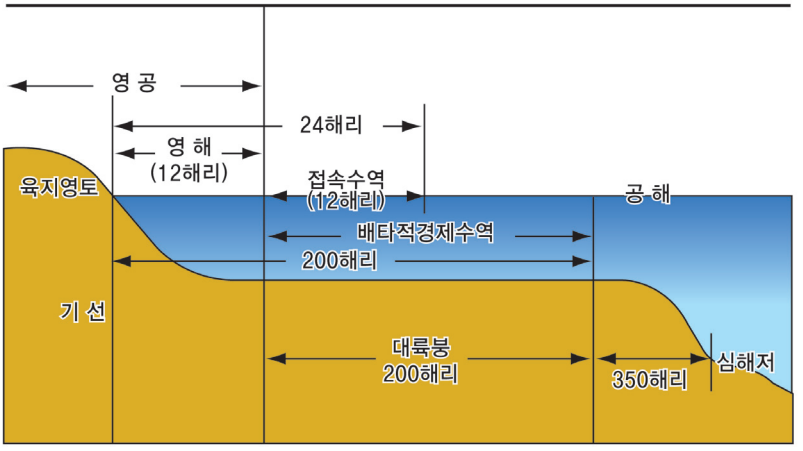
6. 심해저 (Seabed)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는 자국의 영토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대양 한가운데의 해저에서도 광물, 특히 망간, 코발트, 구리 등을 대규모로 채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1967년 몰타의 대표 파르도는 UN총회 연설에서 국가관할권 밖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 선언하고 이들 자원을 인류 전체의

2) 세금 부담 경감,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하여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flag of convenience라 부른다. 파나마와 리베리아가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이다.

이익을 위해 국제기구가 관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개발도상국가의 전폭적 지지로 소위 심해저제도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심해저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 밖에 위치하는 해저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탐사는 자메이카에 본부를 둔 국제심해저기구(국제해저기구라고도 함)에 의해 총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세계에서 7번째로 1994년 8월 태평양 공해상 클라리온-클리퍼튼 해역에서 심해저 망간단괴 광구(15만㎢)를 국제심해저기구에 등록하였으며, 그 동안의 탐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2002년 8월 마침내 7만5천㎢(남한면적의 3/4)의 독점적 개발광구를 확보하였다. 우리나라 독점개발광구내에 망간단괴자원의 추정 부존량은 약 5억1천만톤으로서 연간 300만톤 규모로 채광할 경우 100년이상 개발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한 해양의 기능적 분류에 기초하여 해양에 존재하는 법적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7. 국제해협 (International Strait)

국제해협은 양안이 단일 국가의 영토이거나 복수 국가의 영토이거나를 불문하고 통항이 자유로운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말하는데 흔히 국제항행의 요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영해의 폭이 12해리나 되다보니 국제해협이 일국 내지 복수 국가의 영해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에 의해 국제항행의 요충지가 지나친 통제를 받아 항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외국 선박의 통과통항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해협이용국에게 부여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국제해협제도이다. 즉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영해의 최대한계를 12해리로 지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해협이 일국 내지 복수 국가의 영해로 구성되기에 이르렀지만 제3국의 통과권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 결국 통과통항권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해협이용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국제해협을 통과할 경우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한해협은 전형적인 국제해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Ⅱ

독도, 이어도 문제 및 섬의 중요성

1. 독도역사와 우리 영유권
   1) 우리의 주장
   2) 일본의 주장과 허구
2. 이어도의 법적지위
3. 국가영토로서 섬의 중요성



Ⅱ. 독도, 이어도 문제 및 섬의 중요성



Ⅱ. 독도, 이어도 문제 및 섬의 중요성

1. 독도역사와 우리 영유권

1) 우리의 주장

지리적 위치 : 하나의 섬이 아니라 여러 도서지형물의 집합체인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주 섬과 주변에 산재한 89개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수백년동안 우리 어민의 어업 활동의 무대로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국토의 최동단으로써 중요한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국민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생각해왔



다.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독도는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는 157.5km 떨어져 있으며 거기서 독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명칭 : 독도는 우리 역사상 우산도(于山島),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加持島), 석도(石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 왔다. 이 중 우산도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명칭이었으며 19세기 후반부터는 석도와 독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석도와 독도는 '돌섬' 혹은 '독섬'의 한자표기이며, 독섬은 울릉도를 비롯하여 남부지방의 방언으로 바위섬을 의미했다.

고유영토 :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에 대한 최초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이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 본섬과 독도의 부속도서 즉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산국의 정복은 독도의 정복을 의미한다. 이후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리적 인식은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 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 문헌비고』(1770년), 『증보 문헌비고』(1908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는 팔도총도와 강원도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안용복 사건 : 안용복은 숙종 19년인 1693년 박어둔과 함께 울릉도에서 일본 오야 가문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에 납치되었다. 일본에 도착한 안용복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일본인의 출어를 금지해줄 것을 일본 막부에 요청하였다. 안용복의 이러한 활동을 매개로 하여 한일간에는 울릉도를 둘러싼 교섭을 시작하였고, 결국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본 어부들의 울릉도 침범이 계속되자 안용복은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결국 오키도주 앞에 선 안용복은 일본인의 침범을 근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재차 확인받았으며,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켰다.

조선의 영유권을 확인해주고 있는 일본자료 : 1868년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들어선 신정부인 메이지(明治) 정부는 1869년 3명의 외무성 관료를 조선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1870년에 작성된 보고서가 바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로서 보고서는 일본정부 역시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한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이 1877년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문" 및 부속지도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를 서술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을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울릉전도와 석도(독도)까지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조선정부가 서울 주재 일본 공사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을 근절해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내려진 것으로 관보에도 게재되었다.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불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현 지사의 이름으

로 공표했을 뿐이다. 이러한 일본의 불법행위를 우리 정부가 알게 된 것은 1년이 지난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도군수에게 알리게 된 때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으며, 이 사실은 중앙정부의 내무대신인 이지용에게도 보고되었다. 이에 이지용은 일본의 독도편입을 강하게 거부하였으며,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이에 대한 조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정부에 항의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대한제국에는 고문정치가 행해지고 있었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며, 1906년 2월 1일부터는 통감정치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회복 :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한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은 독립을 쟁취하고 전 국토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기에 이른다. 또한 일본은 1943년 카이로선언에 의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획득한" 모든 영토를 포기하도록 강제되었고 항복문서 역시 이를 수락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시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였으며,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라는 독립적인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 더구나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면서 명백하게 독도를 평화선 안에 두었다.

2) 일본의 주장과 허구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 : 일본은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등 각종 지도와 문헌을 소개하면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오히려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관찬지도라 할 수 있는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 : 일본은 한국 정부가 증거로 삼고 있는 역사서에 대해 지리적 위치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한국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산도가 독도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은 물론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다.

17세기 중엽에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주장 : 일본은 에도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가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여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으며,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서, 또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는 것에 기초하여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외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17세기 중엽의 일본 문서인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거짓이라는 주장 :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조선에서 범죄자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활동에 관한 진술은 자신의 불법 도일죄를 면하기 위하여 과장한 것으로 일본의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을 취조한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는 그 말미에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자산도(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기하고 있어 당시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영유권의 재확인에 관한 주장 :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

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기 때문에,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주장 :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당해 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대한 명기에(서술에)서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이 공개한 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고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해조약에 명시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3000여 개에 달하는 한국령인 부속섬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는 주장 :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두차례에 걸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측은 이를 거부한 사실을 들면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 분쟁중인 조어도(센카쿠제도)나 러시아와 분쟁중

인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자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를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2. 이어도의 법적 지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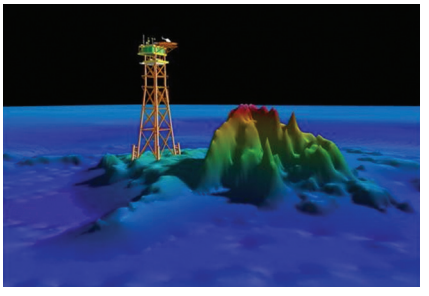
▲ 이어도 해양 종합 과학 기지



▲ 국립해양조사원 http://ieodo.nori.go.kr/open_content/introduce/position.asp
(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389492)

이어도는 해수면 아래 약 4.6m에 위치한 수중암초로 1900년 영국 상선인 소코트라(Socotra)호에 의해 외부에 처음 발견되어 국제적으로는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는 제주도민에게는 전설에 등장하는 환상의 섬 혹은 피안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랜 옛날 이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파고가 10m 이상이면 그 모습이 보이곤 하였다고 전해지는 섬이다.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149km, 중국의 서산다오로부터 동쪽으로 287km, 그리고 일본의 도리시마로부터 서쪽으로 276km의 거리에 위치한 이어도에는 현재 2003년 6월 10일 완공된 해양종합과학



▲ 이어도 지형도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3) http://ieodo.nori.go.kr

기지가 위치하고 있다.[4)]

이어도는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지 혹은 섬과는 달리 영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국제법상 수중암초는 주변수역으로 영해는 물론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중국과 한국간에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지만 해양경계획정의 법원칙을 적용하여 가상의 경계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혹은 해양구조물의 설치와 이용에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어도의 해양종합과학기지는 국제법상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3. 영토로서의 섬의 중요성

섬이란 바다로 둘러싸이고 밀물시에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의 영역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섬은 그 자체로 영해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섬이 연안국의 해안에 인접할 경우 그 섬의 외측한계를 연결한 선을 직선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과 해안선에 인접해 있는 섬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존재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섬이 영해이나 심지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였지만,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의 경우 영해는 가질 수 있으

4)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의 주요 역할
1. '태풍' 등의 예측
2. 근처 심해저 자원 및 바다생물연구에 도움
3. 군사적 위협이나, 잠수함 출몰 등 사전 파악 가능

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은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암석을 섬과 구분하는 기준인 "인간의 거주가능성"이나 "독자적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일부 국가는 도저히 섬이라 인정할 수 없는 암석에 불과한 해양지형물에 대해서도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바도 있다.

결국 섬은 그 크기의 크고 작음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섬으로부터 200해리에 걸친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정책상 매우 중요한 해양지형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섬과 관련하여 국가들 간에는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우리의 독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매우 중요한 정책적·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Ⅲ

동해지명문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실 (자료 : www.seamuse.go.kr)



Ⅲ. 동해지명문제

Ⅲ. 동해지명문제

동해라는 명칭은 우리의 경우 「삼국사기」 동명왕편은 물론 광개토대왕릉비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거의 2000년 이상을 사용해 온 명칭이다. 이에 비해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해"라는 명칭은 1602년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이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면서 "동해"라는 명칭을 되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에도 한일 양국 간에는 해역의 명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국어판 협정문에 각기 동해와 일본해를 별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도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명칭은 관련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국제수로기구와 UN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는 세계지도의 2.8% 정도

가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고 있었으나, 2005년에는 10.8%, 2007년에는 23.8%, 2009년에는 28.0%가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등 점차 병기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지명과 명칭은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경우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며, 민족의 자긍심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 명칭이 세계지도에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Ⅳ. 해양관련 동북아협력체제의 이해

1. 해양자원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협력 체제

1)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이해



1982년 UN해양법협약체제에 기초하여 모든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생물자원은 물론 무생물자원 즉 모든 해양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에 있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 및 러시아는 모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다 즉 동해, 서해, 남해는 모두 그 폭이 400해리보다 좁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이 상호 중첩되는 즉 중첩수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의 권리가 중첩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각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의 최외측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경계선을 그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그어지는 선을 해양경계선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은 물론 대륙붕이 서로 중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해양경계선의 획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한국, 중국 및 일본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로 중첩하는 수역에서 특히 어족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각국 간의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원칙적으로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형평한 해결에 이르러야 한다.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형평한 해결"이라는 의미는 국제재판소의 판례의 축적에 의해 법원칙이 확립되어 왔다. 그런데 형평한 해결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가지 견해로 나누어 발전하였는데, 그 하나는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경계획정을 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각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등거리선인 중간선을 잠정적으로 도출한 다음 형평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이를 약간 수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논의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가의 관계이며 한·중·일이 공동으로 접하고 있는 해양은 그 폭이 400해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로 중첩수역이 발생하므로 필연적으로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는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중·일간에 중첩수역에서의 어로활동은 과연 어떻게 조정되고 규율되어야 할 것인가? 다행히도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기 기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중·일은 이에 기초하여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서로간에 일정 수역에서 어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기 위한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중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체결한 이러한 성격의 잠정적인 어업협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한일어업협정
동아일보 2005년 3월 21일자 기사 못 해양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무관"

2) 1998년 한일어업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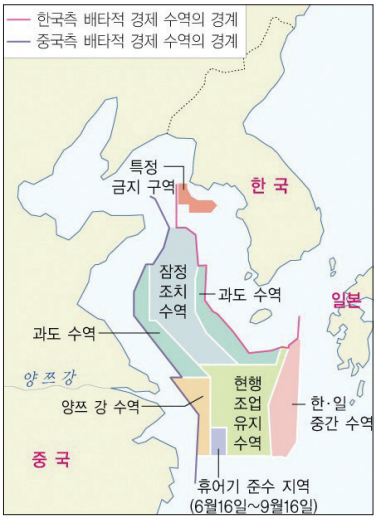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은 1965년에 체결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다음해 1월 22일부터 발효하였다. 1996년 한일 양국이 모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자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며 상호협력의 정신하에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이 체결되기 전에 수립된 잠정약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 양국은 중첩수역의 일부에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였는데, 바로 이 구역이 중간수역으로 불리는 수역이다. 이러한 중간수역은 어업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수역이라 할 수 있다.

3) 2000년 한중어업협정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중국에서는 황해라 부름)의 경우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그 폭이 최대 280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서해 역시 중첩수역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양국은 필연적으로 배타적경제

수역의 경계획정에 합의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와 중국은 한일어업협정처럼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을 달성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상호협력의 정신에 기초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2000년 8월 3일에 체결되어 2001년 6월 30일에 발효한 한중어업협정이다.

한중어업협정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우선 과도수역을 설정하였는데 과도수역이란 협정 발효 후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수역으로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편입되었다. 또한 한중어업협정은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였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의 어민이 공동으로 어로활동을 함은 물론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어선 수의 제한 등 관리를 실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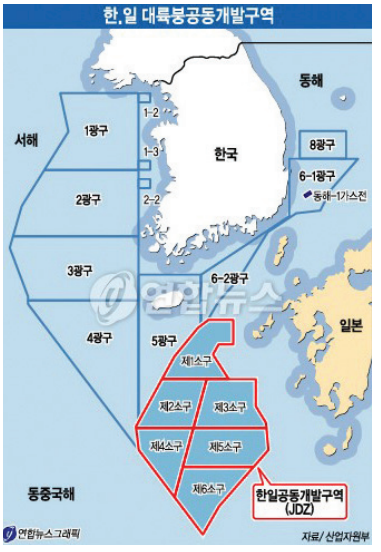


▲ 한중어업협정
사진과 그림으로 이해하는 지리학습(부평고) http://blog.naver.com/tnstn96/80049266197

4)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JDZ : Joint Development Zone)

어족자원과 달리 석유 및 천연가스는 해저의 하층토인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된 대륙붕의 지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자원은 액체 혹은 기체이다 보니 소위 "빨대효과"로 인해 시추와 개발이 경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빨대효과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서로의 권리가 중첩되는 대륙붕의 경우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시 잠정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설사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러한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의 권리가 중첩되는 대륙붕에 대해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것이



▲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자료:산업자원부)

바로 1974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다. 제주도 동남방 약 84,000㎢ 즉 남한영토의 80%에 달하는 대륙붕에 설정된 공동개발구역(JDZ)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붕 천연자원인 석유 및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비록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채택되기 전에 합의된 것이지만 앞서 설명한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상호협력 정신에 기초한 잠정약정체제의 선례가 된 것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해양환경협력

1992년 리우에서 세계환경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국제사회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더구나 해상충돌 및 해난사고로 인한 기름의 대량 유출로 인한 해양의 오염문제 등에서는 어떤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특정 해역 전체를 구성하는 광역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광역해양생태계는 대륙 인근의 큰 연안해역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생태계의 속성상 행정구역 및 국경 심지어 해양경계선과 맞아 떨어지지 않으므로 광역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국가들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태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인류학적 관점을 망라한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에는 64개의 광역해양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서해(황해) 역시 관련국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에 속한다.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환경보존과 관련한 국제협력체제로는 북서태평

양보전실천계획(NOWPAP),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보전사업과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 협력기구(PEMSEA) 등이 있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은 UN환경계획(UNEP)이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18개 지역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해양 및 연안환경의 합리적 이용, 개발 및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장기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4개국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보전사업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황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를 실시하여 종합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 협력기구는 UN개발계획(UNDP)의 지역프로그램 중 하나로 동아시아해역 국가간 해양생태계 보호,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등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한 및 일본, 중국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동아시아해역은 서해(황해)를 포함하여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네시아해, 술루 셀레베스해 등 모두 5개 해역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의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해양투기방지협약(1972)에 1993년 가입하였으며, 당해 협약의 의정서인 런던의정서(1996)에는 2009년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음식물폐수,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3. 해적 활동 대비 협력

해적이란 공해상에서 사적 목적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하는 자를 일컫는 말로써 오늘날 국제법상 해적행위는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해적을 나포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해상 약탈 및 폭행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바다인 공해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소말리아와 같이 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한 국가의 인근 수역인 영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말라카 해협과 같이 국제항행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국제해협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해적의 개념으로는 이들을 규율하는데 미흡한 점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해적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상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약탈 및 폭행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해상불법행위 혹은 해상테러리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 및 해상불법행위, 해상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특히 국제해사기구(IMO)는 물론 국제해사사무국(IMB) 등을 통해 해적퇴치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군은 2009년 3월 3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우리의 선박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해부대를 창설하였으며, 몇 차례에 걸쳐 타국 군함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문무대왕함 무장능력



▲ 문무대왕함
세계일보 2009년 3월 3일자 기사, 소말리아 해적 잡는 '청해부대' 떴다

V. 해양법의 이해

해양과 관련하여 국가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해양법은 국제법의 대표적인 분야로 국제법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통이 깊다. 독립국가의 등장으로 진정한 국제관계 형성이 가능해지자 근대적 국제법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근대적 국제관계 정립의 기초가 되었던 주권이 상호 충돌하게 된 것은 영토와 해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해양과 관련한 국제법 정립은 근대 지식인에게는 큰 관심거리였다. 더구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인간의 지적 영향력은 보다 확대되어 근대 국제법을 정립한 뛰어난 여러 법학자들이 해양법에 관해서도 세련된 형태의 각종 저서와 논문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국제법의 아버지라 알려진 그로티우스는 1609년 『해양자유론』이란 저서를 출판하여 당시 네덜란드인으로서 포르투갈의 독점무역을 반대했던 동인도회사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해양은 인류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해양의 자유를 주창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해양법에 대한 학자적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관습법의 성문화 작업을 맡아온 UN의 국제법위원회의 활약에 의해서였다. 국제법위원회는 UN총회의 요청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 초안을 토대로 개최된

제1차 UN해양법회의는 1958년 ① 영해 및 접속수역 ② 공해 ③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 ④ 대륙붕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양질서와 관련하여 관습법상 확립된 영해와 공해의 이원적 구조를 성문화하였다.

이후 1960년에 개최된 제2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3해리였던 영해의 폭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이 영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여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1967년 몰타의 UN대표 파르도에 의한, '심해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제안이 시발점이 되어 1968년 "국가관할권 이원에 있는 심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가 UN에 설치되었고, 1973년부터 동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시작되었다. 1982년까지 10년이라는 오랜 회의 끝에 드디어 전문과 본문 총 320개 조문 그리고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UN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으며 결국 1994년 11월 16일 당해 협약이 발효하게 되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현재 총 149개국이 당사국이 될 정도로 보편적 국제조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 협약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영해의 폭을 최대 12해리까지로 합의했다는 점,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하여 종래의 영해와 공해라는 이원적 구조를 삼원적 구조로 변모시켰다는 점, 국제해협의 통행의 자유를 강화했다는 점, 심해저제도를 명문화했다는 점, 해양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범을 정비했다는 점, 분쟁해결을 제도화했다는 점 등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 관한 세계의 헌법전"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N해양법협약은 1996년 2월 28일에 발효하였으며, 1996년 8월 8일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제정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우리의 주변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며, 북한은 서명만 하였을 뿐 비준하지 않아 아직도 비당사국으로 남아 있다. 해양강국인 미국은 초기 심해저제도에 대한 의회의 반발로 현재까지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비당사국으로 남아 있다.

Ⅵ. 해양관련 주요 국제기구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 있는 범세계적 국제기구와 특정 지역의 지역국가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해양과 관련된 지역적 수산기구나 환경기구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국제기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운영에 관하여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법기관이다. 1995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9년이고 UN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설립 당시부터 고 박춘호 재판관이 활약을 해 온 바 있으며, 2009년부터는 백진현 재

판관이 활약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심급제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재판은 단심이므로 최종적이다. 다른 국제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분쟁이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UN해양법협약에는 분쟁의 일방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타방을 상대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강제관할사건이라 한다. 이에 반해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회부되는 사건은 합의관할사건이라 한다.

지금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을 살펴보면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어로행위를 하다가 연안국에 나포된 선박과 선원의 즉각 석방에 관한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련한 분쟁은 물론 해양경계획정 사건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 바 있다.



2. 국제심해저기구

(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국제심해저기구(국제해저기구라고도 함) 역시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국제심해저기구는 심해저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기술 및 과학적 지식의 획득과 이전, 증진 및 장려조치를 수행하고 심해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효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제심해저기구의 본부는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함께 1994년 설립되어 1996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1부에 심해저제도가 성문화되는데 성공하였지만 기득권 존중을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던 선진국이 오랫동안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하여 무려 10년이 훨씬 지난 1994년에 가서야 발효되었다. 심해저제도는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입장이 대폭적으로 반영된 별도의 "UN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1994년 7월 29일에 체결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국제심해저기구는 결국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1994년 이행협정에 기초하여 설립된 기구인 셈이다.

국제심해저기구는 ① 총회 ② 이사회 ③ 법률 및 기술 위원회 ④ 재정위원회 ⑤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총회는 UN해양법협약 및 이행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일반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국제심해저기구의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사회의 회원국은 총 36개국으로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총회부터 B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세계 8대 투자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사회의 구성은 주요 소비 4개국으로 구성된 A그룹, 8대 투자국 중 선출된 4개국으로 구성된 B그룹, 주요 수출국 4개국으로 구성된

C그룹, 개도국 중 선출된 6개국으로 구성된 D그룹, 지역안배를 통해 선출되는 18개국으로 구성된 E그룹 등 총 5개 그룹 3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선행투자국으로서 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튼 지역에 심해저 광구를 등록하고, 2001년 국제심해저기구와 망간단괴 탐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심해저 자원 탐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3. 국제해사기구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는 해양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 해운 관련 국제기구이다. 영국의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48년 제네바에서 "국제해사기구를 설립하는 협약"이 채택되어 1958년에 발효되었고, 그 이듬해인 1959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UN의 전문기구로서 현재 169개국의 회원국이 당해 협약에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주된 역할은 해운을 규율하는 포괄적 기본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 해운 뿐만 아니라 해상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규범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선원들의 교육과 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특히 해상안전 분야와 해양환경보호 분야에서 수많은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침과 권고를 마련하

기도 하였다. 해상안전 분야의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달성한 최초의 성과는 1960년 "솔라스(SOLAS)"라고 불리는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이다. 한편, 1967년 인류는 12만톤의 석유를 바다에 유출시킨 토리 캐니언(Torrey Canyon)호 사건의 재난을 통해 거대한 석유운송선에 의한 해난사고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재앙을 체험하고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 결국 국제해사기구가 주축이 되어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와 관련한 회의를 오랫동안 진행한 끝에 소위 "마폴 73/78(MARPOL 73/78)"이라 불리게 되는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1973년 채택하였고, 이는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당해 협약과 의정서는 유류오염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포장된 상태로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물질, 선박으로부터의 하수 및 폐기물은 물론 대기오염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

4. 국제수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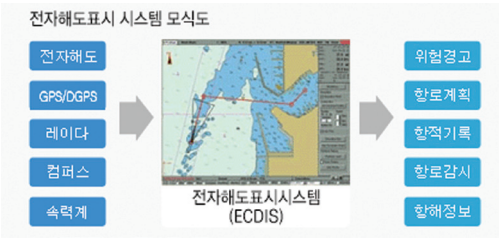
(IH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1967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회의는 국제수로기구 협약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에 기초하여 1970년에 설립된 기구가 국제수로기구이다. 국제수로기구는 각국의 수로관계자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특히 해도에 관한 부호와 약자의 국제적 통일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수로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수로도지의 통일, 수로측량 실시 및 추진의 효율적 방법의 채택, 수로업무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이 1957년 현 국제수로기구의 전신이

라 할 수 있는 국제수로국에 가입한 이래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 전자해도표시 시스템 모식도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5. UN식량농업기구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모든 인류의 영양상태와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촌주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945년에 설립된 "UN식량농업기구"는 흔히 세계식량기구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제5차 총회 때인 11월 25일 가입서를 기탁하여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세계식량기구는 단순히 농업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농업은 물론 임업과 수산업 분야의 UN기구 중 최대 규모의 전문기구이다. 특히 어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규범의 창출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기 때문에 해양관련 국제기구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식량기구는 수산업 분야에서 단순히 어로행위뿐만 아니라 수산양식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식량기구의 주요 부서중 하나인 수산/양식부에는 수산양식 경제정책국, 수산양식 관리국 및 어류생산산업국이 속해 있는데, 이들을 통해 각종 주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수산양식 정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수산분야를 규율하는 국제협정과 규범의 창출에 크게 기여한 세계식량기구는 최근들어 IUU어업의 방지, 규제 및 퇴치를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규범창출에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IUU어업이란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을 일컫는 말로 당해 협약은 불법적으로 잡힌 어획물이 항만을 통해 국제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식량기구는 세계식량기구헌장에 의거하여 각종 국제수산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지역협력체제의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 세계식량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국제수산기구의 수는 현재 44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0여개가 별도의 독자적인 관리체제를 위해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수산기구는 세계식량기구와의 관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세계식량기구 헌장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고, 두 번째 유형은 세계식량기구에 의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세계식량기구 사무국이 기탁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이며, 세 번째 유형은 세계식량기구에 의해 설립되지도 않았으며 사무국이 기탁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세계식량기구가 각종 지원과 자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구 등이다. 현재 국제수산기구는 지역수산기구가 18개, 자문기구가 20개, 과학기구가 6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2개의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3개가 범지구적 수산기구이며, 5개가 지역참치관리기구이고, 4개가 지역비참치관리기구이다.

그로티우스가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어로활동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당시 어족자원은 무한한 자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로기술의 발전으로 무분별한 남획이 빈번해지자 오늘날 국제사회는 인류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중의 하나인 어족자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무

한한 자원이 아닌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어로활동에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식량기구와 국제수산기구는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규범창출과 관리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6. 국제포경위원회
(IWC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고래자원관리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포경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상업적 포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런데 국제포경위원회의 여러 결의가 일부 국가에 의해 무시되자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을 상대로 포경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7.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IOC :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1960년 유네스코 제11차 총회 결의를 통해 그 산하기구로 설립된 정부간 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 및 그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 설립되었다. 해양에 대한 국제공동조사활동을 주관하고 각국의 해양 및 자원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해양오염 감시, 해양자료 교환, 해양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어족자원과 관련해서는 세계식량기구와 협력하여 인도양, 카리브해 및 서태평양해역 등에서 공동조사를 수행한 바도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내에 한국해양과학위원회(KOC)를 설립하였다. 한국해양과학위원회는 1965년부터 1971년 사이에 실시된 쿠로시오해류 합동조사사업에 참여하고, 해양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선진국 주도의 해양과학분야에서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열한 해양관할권 경쟁 및 환경관련 국제조약에 대비한 체계적인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해양과학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4년 3월 한국해양연구원 내에 한국해양과학위원회 사무국을 새로 설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Ⅶ. 극지문제

북극과 남극은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로서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으며, 북극과 남극이 접하고 있는 바다와 관련한 법과 정책은 종래의 해양법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고, 일부 선진국가에서 미끼를 위한 연구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극지문제에 대한 법과 정책적 측면의 관심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 북극

북극은 지구의 기상, 기후, 해류의 순환 등 지구의 환경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북극은 비교적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남극처럼 조그마한 환경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북극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지구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극을 '지구의 기후를 만들어 내는 곳'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극해는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둘러 쌓인 해양으로서 중심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다. 북극해는 면적이 1,200만㎢로 지중해의 4배이며 전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한다.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대륙붕에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주변해역에는 전세계의 주요 수산어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북극해는 그림에서 보듯이 연안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형상을 이루고 있다 보니 풍부한 매장 자원 때문에 최근 연안국들에 의한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빙하가 녹는 현상은 법과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기회와 도전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선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각국의 해안선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에 따라 궁극적으로 각국의 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둘째 북극 주변 해역의 온도 상승으로 기존 어장의 위치와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 빙하가 녹아 새로운 항로가 생성되고 있다는 점(예를 들어 북극의 서북항로는 파나마 운하의 항선과 비교할 때 북미서해안과 아시아 간의 항선이 약 6,500km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다), 넷째 빙하가 녹음으로써 종전에는 접근하기 힘든 해저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와 도전과 관련하여 국가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북극해와 관련하여 연안국간에 해양경계선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부 북극해 연안국은 "선형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영토의 양극단으로부터 극에 이르는 자오선으로 형성된 선형구역내 들어 있는 섬과 육지를 실효적 점유와 무관하게 당연히 근접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형이론에 대해 특정 지역을 선점해온 일부 연안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선의 합의를 이끌기가 무척 어려운 사정에 있다.

옆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북극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등은 1996년 오타와선언을



▲ 북극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세계일보 2009년 4월 23일자 기사, "북극, 깃발 꽂으면 임자" 러 선점 공세

통해 "북극이사회"를 결성한 바 있다. 북극권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 신항로 개설시 항로 이용, 북극권 어류 및 생물자원의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역시 북극과 관련한 규범형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북극이사회에 옵저버 자격을 취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29일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다산과학기지라는 북극기지를 세계에서 12번째로 건립하였다. 북극 기후와 생물 연구 및 해양자원 탐사를 위한 다산과학기지의 건립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남극과 북극에 과학기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8번째 국가가 되었다.



▲ 북극다산기지 전경
(자료 :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2. 남극

또 다른 극지인 남극지역에는 일찌감치 국제규범이 창설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국가들간의 경쟁적인 실효적 지배의 가능성이 증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59년 남극지역에서의 영유권 및 청구권을 동결하는 남극조약이 12개국에 의해 체결되었다. 따라서 남극조약의 체약국은 타체약국의 영유권에 관한 주장에 대해 그 당부를 다투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동결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과 남극지역에 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협의할 목적으로 남극조약체약국협의회를 설립했다.

남극조약의 기본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① 남극의 평화적 이용 ② 과학적 탐사의 자유 ③ 영유권의 동결 ④ 핵실험 금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남극조약체약국협의회는 남극지역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1972년 "남극물개보존협약"과 1980년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 등의 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남극의 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한 환경보호의 문제가 대두되자 남극지역에서 광물자원개발 활동을 50년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극조약의 환경보호에 관한 의정서"를 1991년 채택하여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했으며 다음 해인 1987년 초에 남극기지 건설을 결정하였다. 결국 1988년 2월 17일 남극대륙 북쪽 킹 조지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기지인 세종과학기지가 준공되어 여러 가지 남극관련 관측사업을 개시하였다.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의 무한한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저지형 및 지층탐사, 저서생물, 해양생물 채취, 육상지질 및 암석표본 채취, 육상 동식물 분포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남극의 제2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부지 선정을 마친 단계이다. 극지에서의 과학조사 등의 임무를 위해 우리나라는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2006년부터 건조하기 시작하여 2009년 6월 11일 진수하였다. 아라온호는 남극 및 북극의 결빙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대양역에서 해양연구와 양극 기지에 대한 보급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세종과학기지 전경
(자료: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 아라온호
(자료 :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Ⅷ. 우리나라 해양정책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해양정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배타적경제수역 등 국가관할권에 속해 있는 수역과 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다. 특히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선기선제도에서 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섬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무인도서를 포함한 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배타적경제수역 등 관할 해역의 체계적 관리와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한 준비작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해양문화의 저변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갖춘 해양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성공적 개최를 준비중에 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특히 해양환경의 새로운 비전, 신해양경제 모델 제시 및 해양문화 창달은 물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남해안 썬벨트 구상 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해양관광산업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여 신해양산업을 창출하고 특히 해양심층수의

본격적 개발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세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선진 연안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안 이용 관리와 연안 환경 보전과 관련한 연안통합관리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바닷가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해양환경관리정책이다. 환경관리해역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요 해역별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특히 해양환경 국제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해양생태계보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부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마련은 물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이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



▲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구역
(자료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2008)



▲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 : 해양환경관리공단)

Ⅸ. 관련 직업의 세계

1. 학자 및 연구원

해양법 및 정책과 관련한 직업세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직종은 바로 학자 및 연구원이라 할 수 있다. 해양법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 중 특히 국제법을 전공하여야 하고 해양정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해도 좋지만 해양과학분야와 경제학의 전공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정책은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뿐만아니라 해양과학에 대한 지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양관련 분야는 해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의 세계보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2. 정부공무원

국가의 해양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정부부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법과 정책의 직업세계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처의 공무원은 매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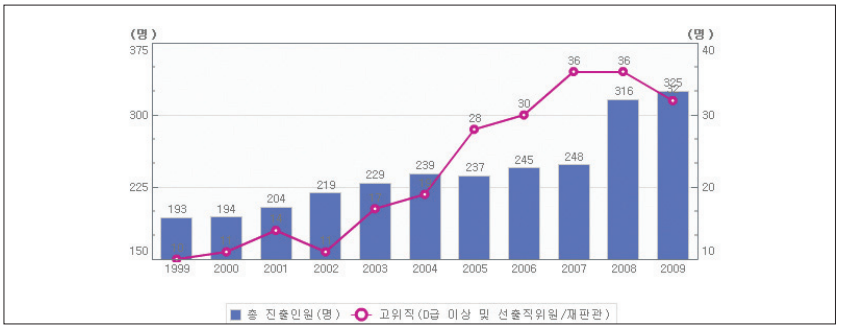
요한 직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해양정책과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로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 밖에 해양자원개발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수산자원 개발 및 이용분야에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외교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등도 해양정책의 수립과 기획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으로의 진출에는 행정고시 등 공무원시험을 통한 방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전문가의 진출을 돕기 위해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해양법이나 정책 그리고 해양과학에 관한 학자와 연구원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 국제기구 국제공무원

정부간 국제기구의 사무국 직원은 흔히 국제공무원이라 불리는 직종이다. 해양관련 국제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는 단순 사무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직군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마다 실시하는 인원충원방식에 따라 결정되지만 UN과 그 전문기구의 진출 방식 중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방식으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JPO는 1996년부터 모집해오고 있는데 JPO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UN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 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다. 외교통상부가 JPO의 선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년간의 수습기간 후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지만 상당수가 정식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JPO는 국제기구 직원의 중요한 등

용문이 되고 있다.



▲ 한국인 국제기구 진출 현황. (자료 : 외교통상부 내부자료)

국제기구의 직원은 국제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천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구 관련 업무의 전문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단순한 사무직원이 아니라 높은 직급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바다 이야기

중학생용

해양정/법/국제협력편 문제

해양정책/법/국제협력편 문제

01 우리의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중 어떤 기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

정답 → 직선기선제도

02 우리나라가 서해와 남해에서 직선기선제도를 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오.

정답 →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을 따라 섬이 많이 존재하는 연안이므로 직선기선제도를 채택하였다.

03 모든 국가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해의 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UN해양법협약 몇 조인가?

정답 → 유엔해양법 제3조

> 제3조(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04 섬이 빽빽하게 존재할 경우 기선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정답 → 섬이 빽빽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선기선방식으로 기선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05 대한해협에 존재하는 선박의 통항질서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오.

정답 → ① 먼저 해협의 정의는 '2개의 해양을 연결하는 자연적 수로'를 말하고 있다.



② 대한해협의 거리는 평균 23해리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게 되면 그 사이에 공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③ 국제해양법 협약에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과 모든 나라의 선박에 대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④ 만약 우리와 일본이 영해를 12해리로 확대선언하고 국제법상 보장되는 통과통항과 무해통항을 인정해 줄 경우, 다른 외국의 선박(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⑤ 따라서 여러 논의 끝에 대한해협에서는 직선기선 3해리를 영해로 하고 있다.

06 제주해협은 국제해협에 속하는지 토의해보시오.

정답 → ① 제주해협은 전통적으로 국제항행에 사용되어 온 대한해협과는 달리 그 국제적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항로는 아니었다. 한때 우리나라는 직선기준을 제주도까지 연결하여 제주해협을 내수로 편입하려고 하였으나 포기하고, 현재는 내수가 아니라 영해로 포함하고 있다. 해남에서 제주북단까지는 47해리가 되지만 그 사이의 여서도, 장수도, 절명서 등을 잇는 직선기준으로 인하여 제주해협은 우리영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주해협에는 공해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제주해협은 지리적 형태 및 그 이용도로 보아 국제항행용 해협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과거로부터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들이 국제항행을 위하여 이용한 해협에 해당하나, 동 해협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여 그 일부가 내수 내지 영해로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내수나 영해에 적용되는 무해통항은 적용될 수 없고, 해협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통항의 정지를 할 수 없는 불완전한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국제항행용 해협이라고 볼 수 있다(제주해협 통항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김현수 – 2003년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자료)

07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존재하는 해양자원을 조사해 보시오.

정답 → 석유, 천연가스, 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상, 해양생물자원,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08 주권과 주권적 권리의 차이점에 관해서 논의해 보시오.

정답 → "주권"이 미치는 해역 – 영해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 또는 장소 : 대륙붕에서는 해저와 하층토에 한정되어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해저와 하층토에 한정되지 않고 상부수역에도 주권적 권리가 미침

※ 주권적 권리 : 주권과는 달리 탐사, 개발, 관리 및 보존 등과 같은 기능적 이용에 한정된 권리

09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

정답 → * 유사점 :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탐사, 개발, 관리 및 보존 등과 같은 기능적 이용에 한정된 권리로 주권 보다 좁은 개념의 권리)가 미침

* 차이점 :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만 국한되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 하층토와 상부수역에도 있으며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음

10 공해의 자유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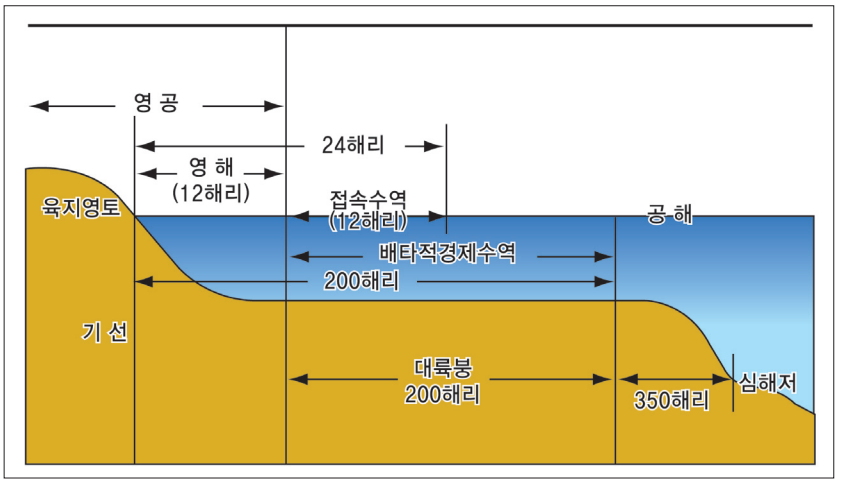
정답 → 공해의 자유 – 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과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가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어업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 인공섬 건설의 자유 등을 보유하고 있다.

11 파나마와 리베리아는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라 할 수 있다. 선박의 소유주들이 자신의 선박을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하는 이유에 대해 토의해 보고 편의치적 선박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시오.

정답 →

-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하는 이유 : 최소한의 제약을 받으며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세부담의 최소화, 운항 및 안전기준 회피, 저임금 선원 공급상의 편의의 장점이 있으며, 편의치적국은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저당권 확보를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선박들도 이러한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하여 파나마 등에 많은 수의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 편의치적 선박의 문제점 : 선박의 등록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선원들의 선박 노동조건이 열악하며 안전조건도 엄격하지 않아 해상사고의 원인이 된다.

12 해양과 관련한 각종 수역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 성격을 토의해 보시오.



해양정책/법/국제협력편 문제

13 심해저 자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이들 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범을 논의해 보시오.

정답 → ① 심해저 자원의 개발 및 탐사는 국제심해저기구(국제해저기구)에서 총괄한다.

②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와 상업적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1994년까지 태평양의 하와이 동남방 2000㎞에 위치한 클레리언 클리퍼턴(Clarion-Clipperton) 해역에서 138만㎢를 탐사하여 세계 7번째로 국제해저기구(ISA)에 심해저 광구를 등록하여, 2002년에는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만5000㎢의 해저 망간단괴 광구의 독점 개발권을 확보하였다.

③ 1998년 마이크로네시아의 얍(Yap) 해구지역 탐사를 시작으로 해저열수광상을 탐사하고 있으며, 이후 2002년부터 피지의 북피지분지, 통가의 라우(Lau basin)분지 등에서 해저열수광상 개발유망지역을 선정하고 독점탐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를 수행한 결과, 2008년 3월 우리나라는 남서태평양 통가 EEZ 내에서 열수광상 독점탐사권 1만9000㎢를 획득함으로써 본격적인 열수광상 개발에 한걸음 다가섰다.

14 독도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장을 대비하는 표를 만들어 보시오.

정답 →

일본의 주장	한국의 주장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	일본에서 제시한 지도에서 오히려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입증
한국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다
17세기 중엽에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주장	17세기 중엽의 일본 문서인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거짓이라는 주장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 조선추작안 일권지각서'는 그 말미에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하여 조선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자산도(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기하고 있어 당시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



일본의 주장	한국의 주장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영유권의 재확인에 관한 주장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주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당해조약에 명시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3000여 개에 달하는 한국령인 부속섬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는 주장	일본은 다른나라와 분쟁중인 곳은 자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를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15 독도와 관련한 주요 사건을 연표로 정리해 보시오.

정답

연도	주요사건
1693년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이후 조정과 일본막부에 서신이 오고 갔고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1946년	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국적의 어선도 이섬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 '맥아더라인'이라 불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이 섬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6월 30일에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 중인 어민 수십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1953년	4월 27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이섬이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섬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번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관련이 없다'하여 이를 기각했다.
2000년	3월 20일 울릉군의 의회가 이 섬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바뀌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100년전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함을 고시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회에 상정했고 최종 통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이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자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해양정책/법/국제협력편 문제

16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입증하는 자료를 조사해 보고 발표해 보시오.

정답 → 독도에 대한 최초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이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 본섬과 독도의 부속도서 즉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산국의 정복은 독도의 정복을 의미한다. 이후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리적 인식은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 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 문헌비고』(1770년), 『증보 문헌비고』(1908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는 팔도총도와 강원도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17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시오.

일본의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면, 우리 영토인 독도는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게 된다.

18 동해(East Sea)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세계지도를 조사해 보시오.

http://www.ngii.go.kr/geography/map_world.do?code=10

19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세계지도를 조사해 보시오.

http://www.worldatlas.com/webimage/countrys/as.htm

http://maps.nationalgeographic.com/maps

20 일본해(Sea of Japan)라는 지명만 사용하고 있는 세계지도를 조사해 보시오.

http://www.mapsofworld.com/asia-political-map.htm

http://go.hrw.com/atlas/norm_htm/npacific.htm



21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이 설립되게 된 배경에 관해 토의해 보시오.

정답 → 한일 양국이 모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자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며 상호협력의 정신하에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이 체결되기 전에 수립된 잠정약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앞서 논의한 해양관련 협력 외에도 국가들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해양관련 사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논의해 보시오.

정답 → 국가들 간의 협력이 요구된 해양관련 사안을 보면, 현재 소말리아나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해적활동에 관련된 사안이 있다. 또한 해양환경문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연안에 해류에 의하여 밀려드는 부유성 해양쓰레기 문제, 태평양 중앙부에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는 부유성 쓰레기 처리문제, 국가 간을 이동하는 회유성 생물자원보호 및 관리문제 등도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23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다른 해양관련 국제기구를 조사해 보고, 그 기구의 기능 및 역할을 논의해 보시오.

정답 →
①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운영에 관하여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법기관이다
② 국제심해저기구 (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국제심해저기구는 심해저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기술 및 과학적 지식의 획득과 이전, 증진 및 장려조치를 수행하고 심해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효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③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의 주된 역할은 해운을 규율하는 포괄적 기본틀

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 해운 뿐만 아니라 해상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규범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선원들의 교육과 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④ 국제수로기구 (IH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국제수로기구는 각국의 수로관계자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특히 해도에 관한 부호와 약자의 국제적 통일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수로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수로도지의 통일, 수로측량 실시 및 추진의 효율적 방법의 채택, 수로업무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⑤ UN식량농업기구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세계식량기구의 주요 부서중 하나인 수산/양식부에는 수산양식 경제정책국, 수산양식 관리국 및 어류생산산업국이 속해 있는데 이들을 통해 각종 주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수산양식 정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들어 IUU어업의 방지, 규제 및 퇴치를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규범창출에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IUU어업이란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을 일컫는 말로 당해 협약은 불법적으로 잡힌 어획물이 항만을 통해 국제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⑥ 국제포경위원회 (IWC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포경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상업적 포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⑦ 유네스코 산하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 (IOC : Intergovernmental Oceano -graphic Commission) – 정부간 해양학위원회는 각



국의 해양 및 그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 설립되었다. 해양에 대한 국제공동조사활동을 주관하고 각국의 해양 및 자원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해양오염 감시, 해양자료 교환, 해양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어족자원과 관련해서는 세계식량기구와 협력하여 인도양, 카리브해 및 서태평양해역 등에서 공동조사를 수행한 바도 있다

24 북극 및 남극에 있어서 각국의 권리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차이점을 논의해 보시오.

정답 → ① 북극 : 북극해와 관련하여 연안국 간에 해양경계선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북극해 연안국은 "선형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극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할수 있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등은 1996년 오타와선언을 통해 "북극이사회"를 결성한 바 있다

② 남극 : 국가들간의 경쟁적인 실효적 지배의 가능성이 증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59년 남극지역에서의 영유권 및 청구권을 동결하는 남극조약이 12개국에 의해 체결되었다. 따라서 남극조약의 체약국은 타체약국의 영유권에 관한 주장에 대해 그 당부를 다투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동결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과 남극지역에 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협의할 목적으로 남극조약체약국협의회를 설립했다.

25 기후변화가 극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고 이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토론해 보시오.

정답 → 우선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각국의 해안선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에 따라 궁극적으로 각국의 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둘째 북극 주변 해역의 온도 상승으로 기존 어장의 위치와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 빙하가 녹아 새로운 항로가 생성되고 있다는 점(예를 들어 북극의 서북항로는 파나마 운하의 항선과 비교할 때 북미서해안과 아시아 간의 항선이 약 6,500km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다), 넷째 빙하가 녹음으로써 종전에는 접근하기 힘든 해저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점이다.

이 책을 만든 사람들

기획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아카데미
윤진숙 학장
백인기 책임연구원
손규희 책임연구원
이슬기 연구원

저자

해양환경/과학편
김경렬 교수(서울대학교)

해양문화/관광편
김성준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역사편
김주식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정책/국제협력편
신창훈 박사(한국해양연구원)

해양산업 I (수산업편)
차철표 교수(부경대학교)

해양산업 II (해운 · 항만편)
박창호 교수(재능대학교)

PPT 제작 : 이호림 · 박지애

캐릭터 제작 : 김광수

도움을 주신 분들

전문가 감수

해양환경/과학편 : 손규희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문화/관광편 : 김성귀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역사편 : 윤진숙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국제협력편 : 현대송 교수(국민대)

해양산업 I : 신영태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산업 II : 정봉민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육 관계자 감수

강진아(인천공항중학교)
곽효길(대성중학교)
김문정(인천동산중학교)
김상환(인천해사고등학교)
김화섭(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유재은(덕수고등학교)
이병호(죽산중학교)
임은성(인천동양중학교)
최용필(백석고등학교)
홍진표(강서고등학교)

바다이야기 (중학생용)

발 행 일 : 2011년 1월
발 행 인 : 김학소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집 · 기획 : 해양아카데미
주 소 :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번지
전 화 : 02-2105-2924
팩 스 : 02-2105-4989
인 쇄 : 비전테크